

경북도, 동부권 5개 시군과 정책연계 강화

도-시군 통합발전 구상 정책협의회 이차전지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등 시군 직결 특례 다수 반영 강조 지역 맞춤 발전으로 경쟁력 ↑



지난 2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부권 5개 시군 기획부서장과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부권 5개 시군 기획부서장과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통합발전구상 정책협의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도정 기조인 '민생·현장·연합'에 맞춘 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 순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부권 회의에 이어 이날은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등 올해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도시개발 등 행·재정 권한 확대 방안이 소개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자원 개발, 지방관리항만 지원, 울릉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어항 지정과 지방어항 지원, 섬 주민 물류 지원 등 동해안 시군과 직결된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는 이러한 특례가 동부권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제자유구역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10개 정책특구가 의제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특례를 동해안권 핵심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군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군별 현안도 집중 논의됐다.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경주 세계 10대 관광

도시 조성, 영덕 강구 연안항 확대 개발, 울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울릉 에너지 확충과 전환 사업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과 중앙부처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경북도는 동부권 5개 시군의 주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사업화와 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동해안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해결 방안 마련, 예산 확보 전략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렬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시군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지역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비한 권역별 발전구상에도 각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 돕는다

경남도교육청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도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입학 학생 1인당 3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적립하는 형태다. 이 카드는 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발급된다. 교육청은 이번 지원으로 약 6만 6000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문화관광공

단체 여행객 버스 임차비 혜택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를 찾는 단체 여행객 유치를 확대해 도내 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0인 이상 단체가 경북 관광지 및 지역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단체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 일반 단체, 여행사이며, 여행 지역 내에서 숙박비·식비·입장료 등 3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는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김진근 기자

전남도, 해양관광 405만 시대 연다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 투입 생활 인구 7500만명 달성 목표도

전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1553억 원을 투입, 해양관광객 405만명·생활 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원이 있지만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어,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

을 구축한다.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도 마련한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탐방 인프라와 요트 기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차별화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설 연휴 경주 찾은 관광객 31% 늘어

양동마을 방문객 전년비 221% ↑

설 연휴 기간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주요 관광지 및 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했고, 교통 이용 방식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동궁원, 양동마을,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집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은 총 8만 79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1% 증가했다.

관광지별로는 동궁과 월지가 3만 87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마총 2만321명, 동궁원 1만6975명, 양동마을 400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계

문화유산 양동마을은 전년 대비 22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족 단위 방문 확대와 체험형 관광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권 유동 인구도 증가세를 보였다. 경주시 무인 계측기 집계 결과 연휴 기간 주요 지점 방문객은 41만1961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이 가운데 황리단길 방문객은 27만5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치는 연휴 기간 누적 기준이다.

불국사 방문객도 증가했다. 경주시가 불국사 관광안내소 집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닷새간 방문객은 8만8226명으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이 중 외국인인 5824명으로 집계됐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칠곡군, 20년 방치 건축물 철거 돌입

복삼읍 미관저해 JK아파트 정리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복삼 JK아파트 전경.

공사 중단 이후 20년 넘게 방치돼 온 복삼 JK아파트가 철거 절차에 들어가면서 칠곡군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이 본격화됐다.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흉물 건축물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며 복삼읍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삼읍 중심부에 위치한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정을 약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안전 우려와 경관 훼손, 생활 불편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복삼읍거리 인근에 자리해 읍내 중심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주민들 사

이에서는 해당 건축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는 18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 공간 확보로 상가와 주거 지역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하동군, 빈집 활용 '그린 홈 어게인' 추진

창업·공유공간으로 재생해 청년·전입희망자에 기회 제공

하동군이 방치된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활용해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에 나선다.

하동군은 올해 '별천지 하동 빈집 매력화(그린 홈 어게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에너지 효율을 갖춘 주거 공간과 창업·공유 공간으로 재생해 청년과 전입희망자에게 주거·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방식은 빈집과 마을 공동 창고를 소유자에서 군이 무상 임대받아 6년간 공공임대로 운영하는 뒤 반환하는 구조다. 사업량은 빈집 4개소, 마을 공동 창고 1개소이며 사업비는 빈집 개소당

최대 7000만원, 마을 공동 창고 개소당 최대 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이 있는 빈집·마을 공동 창고로, 빈집은 전국 빈집 실태 조사 통합 가이dra인에 따른 1~2등급이어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인구 소멸 지역 외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마을 공동 창고의 경우 마을회 소유 창고를 개·보수해 지역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사업 주체도 함께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후에는 태양광 설치, 고효율 난방방기 도입, 단열재 보강 등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위기 가구 발굴·복지 연계

경남도가 3월 위기아동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위기 아동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앞서 도는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가족돌봄청년 의식 사례 데이터 8373명을 활용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위기 아동 지원도 병행한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연 2~4회 가정 방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